

부록

1_관련 조문

1)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조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과세표준(부가가치세액·감면세액 및 공제세액+가산세)에 100분의 21을 적용한 금액 중 1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해당 시·도의 안분액의 35%를 출연해야 한다. 다만,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균특 전환사업, 전환사업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보전분과 교육비 전출금 보전분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즉,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3조 5,681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전분 2,338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보전분 5,718억 원, 교육비 전출금 보전분 1,395억 원의 합인 4조 5,131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비지수 가중치를 곱하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배분한 금액의 35% 수준을 출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을 재정 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용자관리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이다.

재정지원계정은 지역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으로 조합 운영 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 중 3%를 제주에 우선 배분한다.

전환사업보전계정은 1단계 재정분권 이후 전환사업 보전을 위한 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3조 5,681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전분 2,338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보전분 5,718억 원, 교육비 전출금 보전분 1,395억 원의 합인 4조 5,131억 원으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이다.

[표 1]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재정지원계정 시·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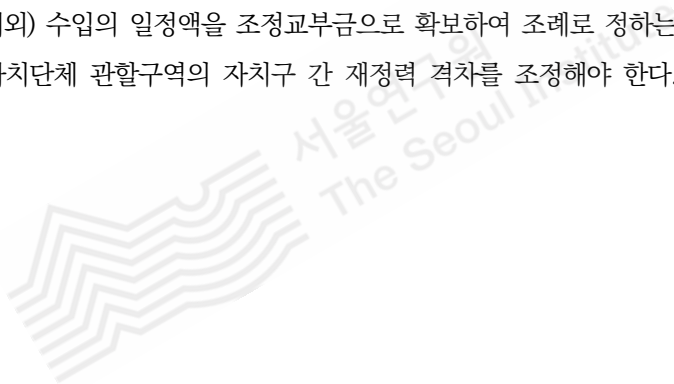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361.4	382.6	433.3	442.5	481.7
서울	167.5	175.5	196.7	200	195.3
인천	34	36.1	41.2	42.2	41.4
경기	159.9	171	195.4	200.3	245
배분	361.4	382.6	433.3	442.5	481.7
재정지원계정	180.7	191.5	216.9	221.5	241.1
서울	7.3	7.7	8.2	8.8	8.4
부산	7.6	8.1	8.6	8.8	9.7
대구	18.4	19.5	20.7	21.9	22
인천	4.7	4.8	5	5.3	8.6
광주	15.6	17.5	26.4	24.6	27.9
대전	16	17	18	19.1	19.2
울산	14.9	15.4	16.3	17.2	24.3
세종	0.7	0.9	1.2	1.3	1.4
경기	7.7	8.1	8.6	9.2	8.6
강원	15.7	16.6	17.6	18	15.9
충북	8.8	9.7	15.7	14.2	15.7
충남	8.7	9	9.5	9.8	10.8
전북	9	9.4	10	10.6	11.4
전남	15.2	15.8	16.7	17.3	18.7
경북	14.9	15.6	16.5	16.9	18.5
경남	10	10.5	11.2	11.7	12.6
제주	5.4	5.7	6.5	6.6	7.2
사무국	0.1	0.2	0.2	0.2	0.2
용자관리계정	180.7	191.1	216.4	221	240.6

2) 조정교부금 관련 조문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29조의2는 조정교부금을 시·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한다.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과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이렇게 조성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해야 한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제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



[표 2]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원과 교부율 변화

구 분	취득세·등록세 (1989~2010년)	취득세 (2011~2012년)	보통세 (2013년~)
서울	60%(1989~1990년) 50%(1991~2010년)	50%	20.5%(2013년) 21%(2014~2015년) 22.6%(2016년~)
부산	51%(1989~2007년) 55%(2008~2010년)	55%	19.8%(2013~2015년) 20.9%(2016년) 22%(2017~2019년) 23%(2020년~)
대구	52%(1989~2008년) 56%(2009~2010년)	56%	20.65%(2013~2015년) 21.65(2016년) 22.29%(2017년~)
인천	36%(1989~1995년) 50%(2009~2010년)	40%	20%(2013~2016년) 27%(2017년~)
광주	70%(1989~2010년)	70%	23%(2013~2016년) 23.9%(2017년~)
대전	68%(1989~2010년)	68%(2011년) 56%(2012년)	21.5%(2013~2016년) 23%(2017년~)
울산	55%(1998~1998년) 58%(1998~2010년)	58%	18.1%(2013~2015년) 20%(2016년~)

출처: 임상수(2021),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중앙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합리적 자원배분 방안 연구”
인용, 조임곤 외(2018),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 재인용.

주. 각 시·도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참조.

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하 교육비 전출금)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수준이다.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수준이다.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수준이다.

